

# 전염병 시대의 혐오와 차별: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

김재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2020. 4. 10.

# 1. 코로나19 초기, 혐오/인종주의의 확산


-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WHO에 '신종폐렴'에 대해 보고
- 2020년 1월 19일: 국내 첫 환자 발생 (20일 확정 판정)
- 2020년 1월 20일: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는 방송(중난산鐘南山)
- 2020년 1월 21일: 국내 언론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가짜뉴스, 혐오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
  - SBS '우한 코로나' 치료하러 한국 간다? (2020.1.21.)

중국 거주자: "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녀서 학교 모임이 있었어요. 부모가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폐렴 환자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은 문제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가까운데 비행기 값만 내면 한국 가서 다 치료가 가능한데 중국에 왜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SBS

[전화연결] "중국인들, 우한 코로나 치료하러 일부러 한국행 소문도..."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20.01.21. 오후 4:45  
최종수정 2020.01.21. 오후 4:52

 11  7  

- 몇 가지 암시
- 한국 공중보건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중국인
-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몰려올지 모름
-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름
-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암시
- 다음날 이 기사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온라인 카페 및 커뮤니티에 현재도 남겨져 있음
- 그리고 '우리 세금을 축내는 중국인' 이라는 담론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강화됨
- 2015년 메르스(MERS) 당시에 중국인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이야기가 확산됨
- 이러한 괴담은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청원진행중 —

##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참여인원 : [ 694,005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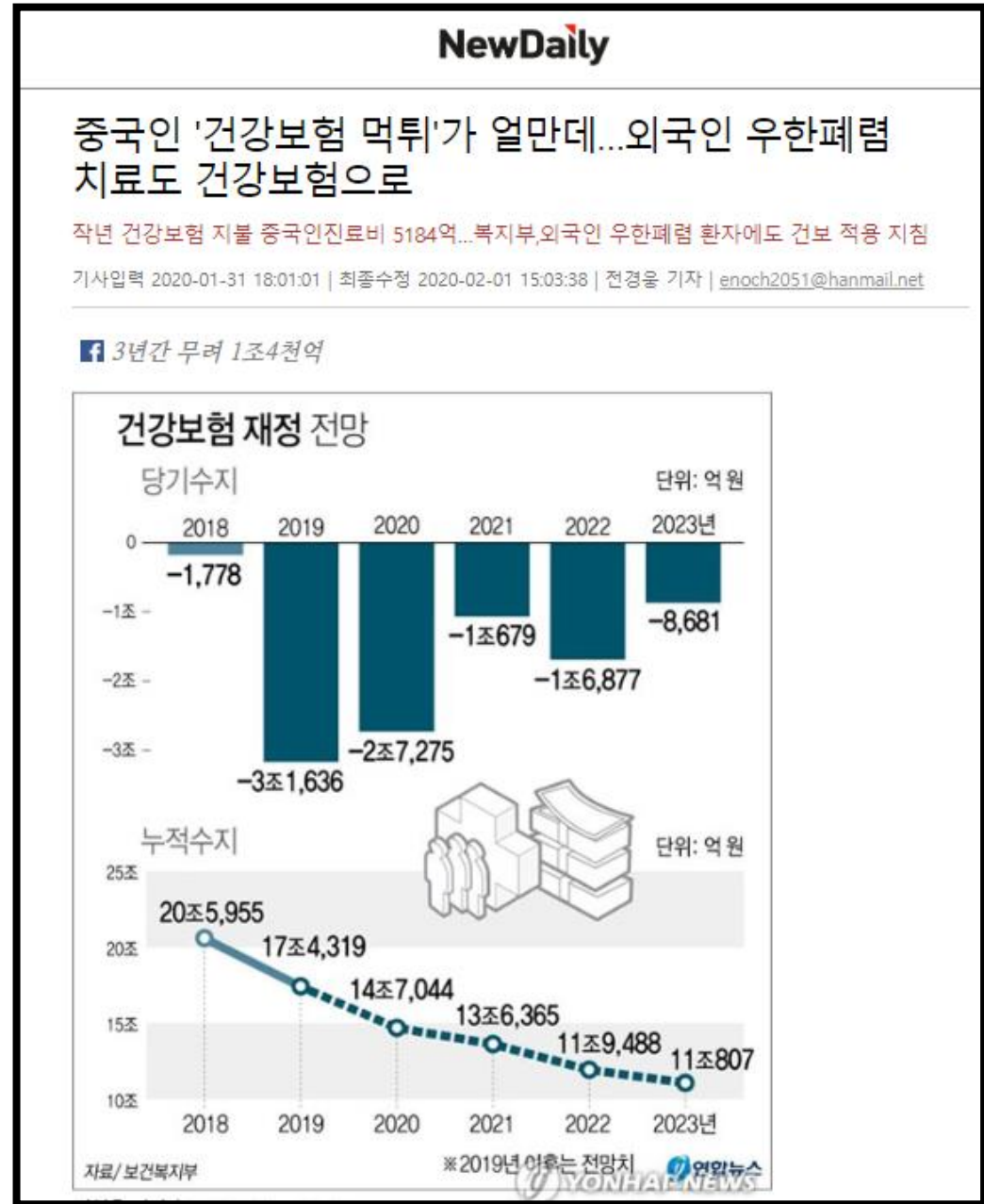
### 청원내용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23일
- 종료시점, 참여인원은 761,833명
-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인종주의의 결합
- 그리고 이는 중국을 불신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짐
- 중국인 입국 금지의 정치화(2020년. 1월 25일 경부터)

- NewDaily, 2020. 1.31.
- 건강보험 재정 전망 그래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 제시
- 작년 중국인 진료비가 5184억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의료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
- 하지만 직장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중국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
- 근거 없이 '건강보험 먹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보냄
- 국내의 인종주의적 정서를 강화시킴
  - > 온라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고, 정부를 친중으로 프레임화하는데 사용되었음
-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로 확산



## 2. 코로나19(COVID-19) 명칭을 둘러싼 논란

- 2020년 1월 27일. 청와대가 '우한 폐렴'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공지
- WHO는 2015년 5월 8일 '신종 인간 감염질환 이름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권고에서 돼지 플루나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이름들이 특정한 사회공동체나 경제 부문에 오명을 씌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질병 이름은 그것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문제가 되고, 우리는 어떤 질병 이름들이 특정한 종교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 일원들에게 좋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켜 여행, 상업, 교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어내고, 가축 동물의 불필요한 도살을 촉발하는 경우를 보아 왔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 WHO는 2020년 2월 11일 이 질병의 공식 명칭을 COVID-19(코로나19)로 결정

## Media centre

[Media centre](#)

▼ [News](#)

▶ [News releases](#)

▶ [Statements](#)

▼ [Notes for the media](#)

[Previous years](#)

▶ [Commentaries](#)

▶ [Events](#)

[Fact sheets](#)

[Fact files](#)

[Questions & answers](#)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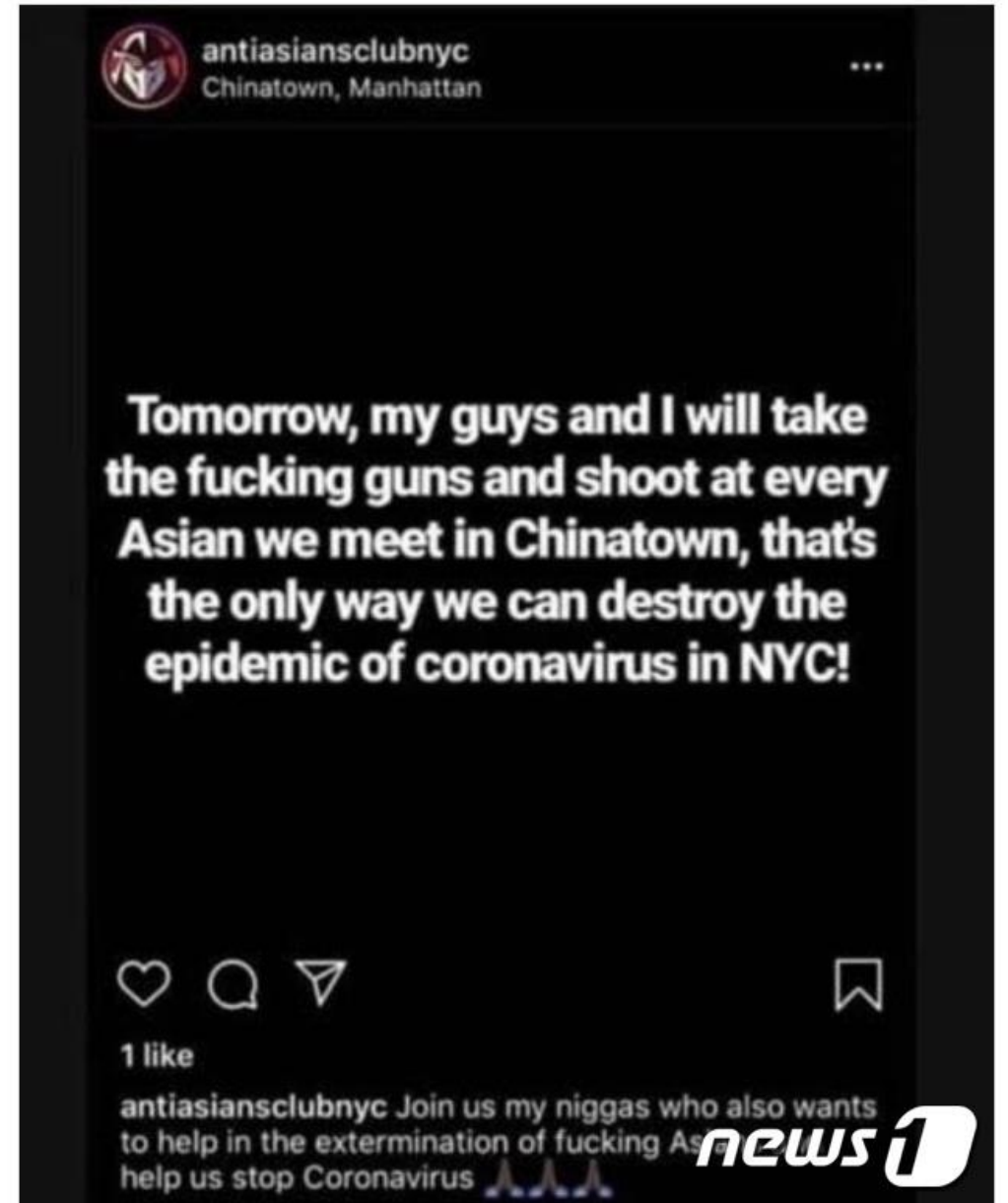
### WHO issues best practices for naming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

Note for the media

8 MAY 2015 | GENEVA - WHO today called on scientists,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media to follow best practices in naming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 to minimize unnecessary negative effects on nations, economies and people.

“In recent years, several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 have emerged. The use of names such as ‘swine flu’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has had unintended negative impacts by stigmatizing certain communities or economic sectors,” says Dr Keiji Fukuda,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Health Security, WHO. “This may seem like a trivial issue to some, but disease names really do matter to the people who are directly affected. We’ve seen certain disease names provoke a backlash against members of particular religious or ethnic communities, create unjustified barriers to travel, commerce and trade, and trigger needless slaughtering of food animals. Thi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peoples’ lives and livelih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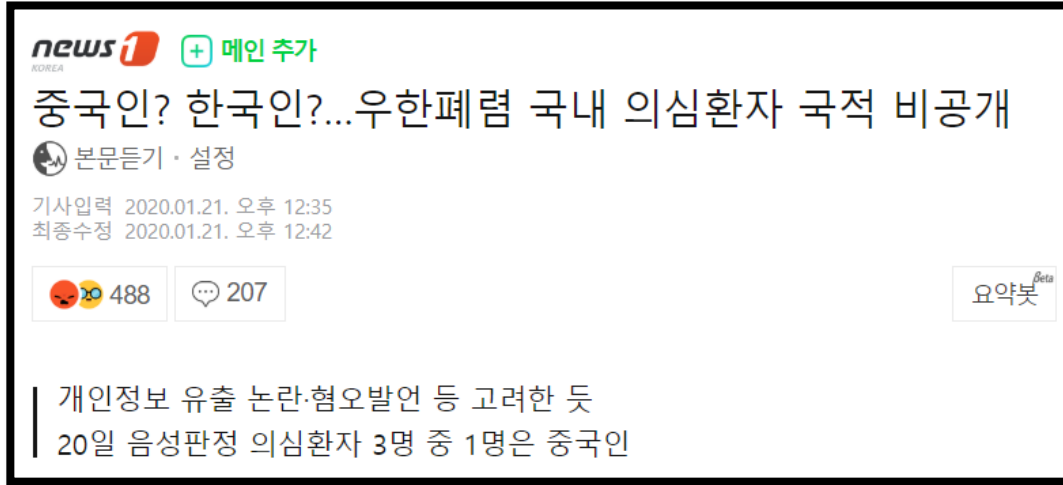
- 트럼프의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 표현 (2020. 3. 17.)
-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미국발 주장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인종주의 정서와 혐오범죄로 이어짐
- 2020년 4월 1일 인스타그램에 개설된 ‘안티아시안클럽뉴욕’ 계정이 올린 총격 암시 글 (동아일보, 2020.4.9.)
- 명칭이 주는 메시지
- Nature, editorial, “Stop the coronavirus stigma now” (2020. 4. 7.)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개설된 '안티아시안클럽뉴욕' 계정이 올린 총격 암시글.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1



### 3. 혐오와 환자정보공개



- 2020년 1월 21일: 질병관리본부 는 감염자의 국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 발언 등을 고려
- 하지만 반발로 인하여 정보 공개



- 질병관리본부가 의심환자 국적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환자의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
- 메르스 백서는 “환자 정보 공개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어디까지 유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라고 환자 정보 공개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363쪽)
-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인종주의적 담론이 넘쳐나자, 당국은 개인 정보를 공개함
- 이후 환자 동선을 비롯 환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사태 초기 개인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비책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림
- 환자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비난, 일반 국민은 걸릴 경우 자신에게도 비난이 가해질까 두려워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20.3.9.)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확진자의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함(20.3.14.)

## 4. 전염병 통제의 걸림돌, 혐오, 낙인, 차별

- 혐오와 낙인, 차별을 억누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엄격한 공중보건정책의 실패 사례들: 한센병, 결핵, HIV/AIDS 등
- 한센병의 사례: 조선총독부가 전염병 통제를 목적으로 부랑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작하자,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0년대 조선에 15,000명 가량으로 추정되던 환자 수는 광복 후 1950년대가 되면 5만에서 7만으로 추정되게 됨. 환자 집단을 범죄화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보호받고 치료되어야 할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질병 통제가 실패
- 1906년 전후 샌프란시스코 흑사병의 사례: 백인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의 문제. 중국인 비난으로 인해 정작 흑사병 통제에 실패함.
- HIV/AIDS의 사례: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HIV 초기 검진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병이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사회 인권 문제들  
: 신천지에 대한 혐오; 대남병원 등 시설의 취약함;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애인 생활의 문제; 구로 콜센터 문제(노동조건의 문제); 여성(돌봄 노동 등); 난민; 외국인 등
- 유학생들의 귀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 저하로 인하여 위기감이 증가하자 정부에서 전자팔찌 논의가 등장 - '한국 시민사회단체/시민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코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2020.4.9.)
-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혐오와 낙인, 차별은 언제 폭발할 수 없는 문제임.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노동 환경과 취약계층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 5. 전염병 통제에 있어 인권적 관점의 도입

- 전염병 통제에 있어 혐오/낙인/차별을 억누르는 인권의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
- WHO: Country & Technical Guidance: Coronavirus disease(COVID-19)
  - 여러 항목 중 Humanitarian operations, camps and other fragile settings이 포함됨
  -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여성, 노인, 청소년, 청년, 어린이, 장애인, 원주민, 난민, 이주민, 소수자 집단 등
  - 소외된 집단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COVID-19 Guidance" (2020. 3.)
  - : Access to health care; Emergency measures; Leaving no one behind; Housing;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in detention and institutions;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Migrants and Refugees; Social and Economic Impacts; Privacy; Gender; Water and Sanitation
- UNAIDS 2020, "Rights in the time of COVID-19: Lessons from HIV for an effective, community-led response" (2020. 3.)
- 최근 국제공중보건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발전해 옴
- 1) 인권적 접근, 2) 근거기반, 3) 역량강화, 4) 공동체의 협력

표 4-6-9.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고려사항

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법에 따라 제공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둘째, 일반 선(general good)의 정당한 목표를 가진 경우에만 유보 가능하고  
셋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 사회에서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넷째, 동일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가장 덜 침습적이고 제한적인 수단으로  
다섯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여섯째, 임의적으로 부과되거나 차별적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일곱째, 공중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국가는 그들이 부당하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호혜성의 원칙).

자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건강세상네트워크, (2016)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 2015 메르스 백서, p.355.